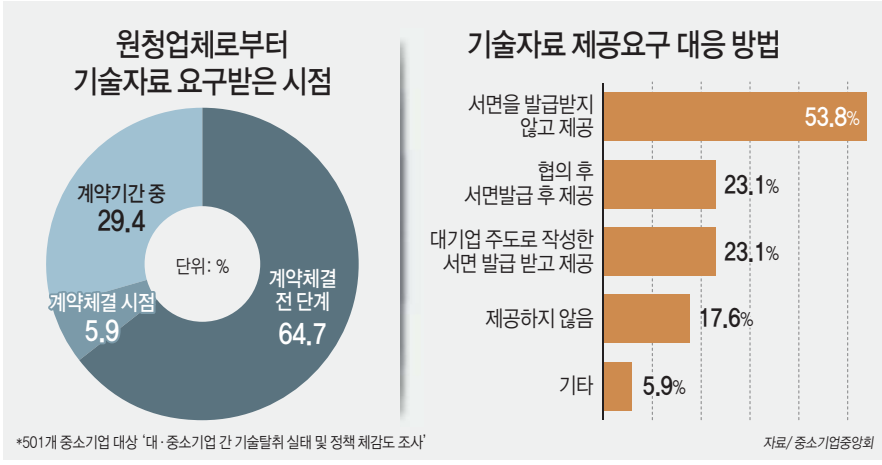
하청기업 65% "계약 안하고 기술자료 먼저 요구받아"

〈17곳〉

중기중앙회, 기술탈취 실태조사

노하우 공개 압력하는 행위 만연
기계·설비·자동차분야 특히 많아
절반 이상 서면 계약서 발급 안해



*501개 중소기업 대상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 실태 및 정책 체감도 조사'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대기업 등 원청업체로부터 최근 3년간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하청 중소기업이 조사대상 501곳 중 3.4%인 17곳으로 파악된 가운데 절반 이상은 계약 체결도 하기 전에 기술자료를 요청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계·설비(8.6%)나 자동차(5.5%) 업종을 영위하는 하청업체들이 이같은 '불공정 경험'이 많았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이 설계에 반영한다며 (하청업체가)제작한 제작도면 제공 요구 ▲협력업체가 개발한 기술 및 제품을 대기업이 직접 개발한 것으로 둔갑 ▲입찰과정에서 자료 공개 요청 ▲하청업체 설계 자료를 기반으로 입찰 참여시킨 뒤 기술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단가 인하 등 하청 중소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기술탈취 사례도 다양했다.

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8월 사이 50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 실태 및 정책 체감도 조사'를 실시해 1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원청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시점은 계약체결 전 단계가 64.7%로 가장 많았다.

'갑'의 관계에 있는 기업이 하청기업에 일감을 받아가기 위해선 특허나 연구개발(R&D) 등 노하우를 먼저 공개하라고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이다.

게다가 기술자료를 요구받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13곳 중 7곳(53.8%)은 대기업으로부터 서면 계약서를 발급받지 않았고, 3곳(23.1%)은 서면 계약서는 발급받았으나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작성했다고 응답했다.

'제공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17.6%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을 유지하겠다'고 답한 원청업체는 53.8%로 절반이 살짝 넘는 수준에 그쳤다.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38.5%), '보통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7.7%)로 결국 비밀을 지키지 않겠다는 답변 일색이었다.

대기업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불량(하자) 원인 파악(51.9%), 기술력 검증(45.9%)이라는 답이 많았다.

이외에 납품단가 인하에 활용(24.6%), 타 업체에 기술자료를 제공해 공급업체를 다변화하기 위해(11.2%)라는 응답도 있었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 대책'이 기술탈취 근절에 도움이 될 것(41.9%)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대책은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강화(44.7%), 기술탈취 행위 범위 확대(22.8%), 기술임치·특허공제 지원제도 활성화(14.6%), 집중감시업종 선정 및 직권조사 시행(10.2%) 등이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으면 중소기업이 거절하기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서면을 발급해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고 나아가 중소기업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거래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롯데의 훈훈한 추석 명절 보내기' 파트너사 대금 7000억 조기지급

中企 파트너사 2만 여 곳 혜택

롯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파트너사들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납품대금 약 7000억원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롯데는 명절을 앞두고 파트너사들이 급여 및 상여금 등 일시적으로 다양한 곳에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롯데백화점, 롯데면세점, 롯데e커머스 등 30개사가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며, 2만여개의 중소 파트너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기 지급은 9월 거래분에 대한 것으로 연휴 3일 전인 9월 19일까지 모든 지급이 완료된다. 이는 평상시 대비 약 12일 앞당겨서 지급되는 것이다.

한편 롯데는 대중소기업간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2013년 명절부터 중소 파트너사 대상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해 오고 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약을 맺고 중소협력사의 원활한 신용대금 결제를 돕는 '상생결제제도'를 전 계열사에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현금결제도 완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 중이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

"해외 유학 준비해볼까"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8 해외 유학·이민 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치솟는 휘발유값… 1년 만에 10.5% 올라

16주 만에 최대폭 ⬆… 지속 상승 전망

16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가격표 모습./연합뉴스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3개월여 만에 최대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난 6월 넷째주 이후 꾸준하게 상승폭이 지속, 향후에도 가격이 지속 오를 전망이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둘째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6.8원 오른 1630.3원으로, 경유는 143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 6월 넷째주 이후 11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진 것으로 또 다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운 셈이다. 특히 주간 상승폭으로는 지난 5월 마지막주(14.9원) 이후 16주만에 가장 큰 수치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1630원을 넘어선 것은 2014년 12월 셋째주(1655.97원) 이후 처음이다. 1년 전인 지난해 9월 둘째주(1475.1원)와 비교하면 무려 10.5%나 올랐다.

자동차용 경유는 전주보다 7.0원 오른 1431.6원에 판매됐고 실내 등유는 954.7원으로 4.4원 올랐다.

기업별로는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ℓ당 평균 7.0원 오른 1605.8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2014년 12월 셋째주(1621.2원) 이후 처음으로 1600원을 넘어섰다. 가장 비싼 SK에너지는 6.7원 오른 1647.5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평균 8.0원이나 오른 1721.3원이었다. 대구는 5.2원 오른 1602.6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가격에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석유공사 측은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 감소와 미국 원유 생산량 하향 전망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으나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생산량 증가로 상승폭이 제한됐다"며 "국제유가가 4주 연속 상승함에 따라 국내 제품 가격도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외교의 슈퍼볼' 유엔총회 내일 개막

북핵 등 '북미 외교전' 주목

북한 리용호 외무상 수석대표 등록
협상 국면 속 부드러운 분위기 관측

북미 핵협상의 가늠자가 될 제73차 유엔총회가 오는 1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막을 올린다.

유엔은 18일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전 에콰도르 외교장관) 총회 의장 주재로 개막식을 열고 차기 총회 개시일 직전인 2019년 9월 16일까지의 새로운 회기를 시작한다.

흔히 유엔총회는 '외교의 슈퍼볼'로 불린다. 총회 개막 기간 각국은 연설은 물론 다양한 양자외교를 통해 자국 국익 극대화를 위한 치열한 외교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모두에게 의미 있는 유엔 만들기: 평화롭고 평등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글로벌 리더십과 책임 공유'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 기간에는 지속가능한 개발, 국제평화·안보, 인권 등 9개 분야 175개 의제에 대한 토의가 이뤄진다.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총회의 하이라이트인 '일반토의'(General Debate)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린다.

일반토의는 각국 정상이나 외교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대표로 참석해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를 기조연설을 통해 내놓는 자리다.

지난해 유엔총회. /뉴시스

이번 일반토의에는 국가원수 97명, 부통령 4명, 정부 수반 41명, 부총리 3명, 장관 46명 등 196개 회원국 수석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올해도 유엔총회는 북핵, 북한 문제가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북미 간에 극도의 긴장이 연출됐지만, 올해는 지난 6월 북미 첫 정상회담 이후 협상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 모두 '절제'된 모습 속에서 상대의 양보를 압박하는 장으로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싱가포르 첫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북한은 종전선언과 제재완화 등을 요구하면서 북미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와 관련, 북한의 실질적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제재를 지속해야 한다는 미국과 제재완화 및 해제를 요구하는 북한, 중국, 러시아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북측은 올해 유엔총회 수석대표로 리용호 외무상을 등록했으며 일반토의 연설은 이달 29일로 잡혀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유엔총회 참석 가능성과 이를 계기로 한 종전선언 여부가 주목을 받아왔지만 현재로서는 이번 유엔총회 개막기간 실현 가능성은 쉽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을 이끌고 평양에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달 말 유엔총회 방문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은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18~20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한 바 있어 유엔 무대에서의 남북미 정상외교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도 평양에서의 남북 정상회담 논의 결과를 토대로 유엔총회 무대에서 일반토의 연설,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미 간 협상 진전을 촉진하는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